



多世帯주택 各種 건축基準 완화 建築설비設計 3 만㎡ 서 2 만㎡ 로

건설부는 건축법에서 제도화한 바 있는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피어야할 거리 및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등 각종 건축기준을 완화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건설부가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5 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인 이 개정안은 건축물내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설허가시에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한후 허가해주고 주거지역에서 소규모 사설강습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한 것인데 그 주요내용은 △ 공동주택은 출입구로부터 도로까지 폭 3 m 이상의 통로를 확보토록 하던 것을 다세대주택(연면적 330㎡ 이하로서 2 세대 이상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은 통로의 폭을 2m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 공동주택의 각부분의 높이는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 배 이하로 하던 것을 다세대주택은 정북방간에 한하여 제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 공동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외벽까지 3m(2 층 이하는 2 m) 이상, 처마끝까지는 2 m(2 층 이하는 1.5m)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외벽까지는 1 m 이상, 처마끝까지는 0.5 m 이상만 띄우도록 하였고 △ 연면적 330㎡ 이하인 주택의 옥외계단설치부분은 건폐율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 공동주택은 주거전용지역안에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3 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은 건축할 수 있게 하였고 △ 자연 녹지지역안에서 연립주택의 경우 시장·군수가 녹지보존을 위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던 것을 다세대주택은 시장·군수가 공고한 구역이 아니라도

건축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 천㎡ 이상의 업무시설 및 병원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도도록 했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현행법령에 적합하게 시정하지 않는한 이를 허용하지 않던 것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법령에 적합하고 또한 중전의 위반사항이 악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개축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 주거지역안에서 사실상 습소의 경우 예·체능계, 전자계산, 전자 및 산업응용계 습소만을 건축하던 것을 연면적 300㎡ 이하로서 환경보존법상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실상 습소(대학입시 학원 제외)는 건축할 수 있게 하고 공장의 경우에는 환경보존법상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만 건축하던 것을 공해배출량이 환경보존법상의 배출시설설치허가기준 배출량의 2 배 이하인 인쇄·봉제·필립현상 및 두부제조공장은 12m 이상 도로에 6 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 상업지역 안에서 공장의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요하더라도 공해배출량이 환경보존법상의 배출시설설치허가기준배출량의 3 배 이하인 인쇄·봉제·필립현상 및 두부제조공장은 건축할 수 있게 했으며 △ 점포와 대중음식점 및 다방 등이 복합되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될 경우 점포의 면적에 관계 없이 판매시설로 분류하여 주거지역 등에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을 점포의 면적이 200㎡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될 경우에만 판매시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면적 3 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해당분야의 기술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대상을 확대하여 연면적 2 만㎡ 이상

인 건축물을 해당분야 기술사가 설계하도록 했다.

靑少年시설 29개 年内증설

勤勞靑少年 賃貸아파트 400家口 건설

정부는 노신영 국무총리서리주재로 금년도 제 1 차 청소년대책회의를 열고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세부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이용 시설 확충 장기계획을 年内에 수립, 우선 올해 안에 117억 9 천만원을 들여 자연학습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센터 등 각종 청소년시설 29개를 증설하고 건축관계법을 개정하여 대단위 아파트지역 등에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설치 의무화하는 한편 그린벨트 내의 청소년이용시설 신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과 기업체 등 민간소유 청소년이용시설의 개방을 적극 권장, 주민공동생활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해 청소년연맹 등 26개 청소년단체에 7 억 3 천 800 만원을 지원하고 학생의 1 인 1 단체가입을 적극 권장키로 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 청소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지도자확충을 위해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퇴직교원 및 공무원 등의 자원봉사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청소년문화행사의 진작을 위해 공공시설을 임대사용할 때는 관람석의 일정비율을 청소년관람석으로 지정, 할인제를 실시토록 했으며, 청소년국제교류사업도 정착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군의 지원병제도를 확대 실시, 무직 또는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을 조기입대시켜 1 인 1 기교육기회를 부여하며 올해안에 400가구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무직 미진학 청소년의 취업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고졸 이하 학력자의 고용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내 훈련실시기

관에 대한 교사의 인건비지원 및 세계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 예산규모는 통합재정수지균형과 통화중립적인 재정운용을 전제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세입내 세출이 되도록 책정

○ 성장 및 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크면서 국제수지에 부담이 적은 부문을 중점 지원하고 경상경비의 증가억제, 경직성경비의 효율제고 등 예산절약노력은 더욱 강화

○ 예산편성기준단가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기준소요물량은 원칙적으로 85년 수준을 유지.

大型건물廢熱回收장치設置의무화

서울市 延2 천㎡ 以上 숙박施設 등

앞으로 건축연면적이 2천㎡(606평) 이상인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해야 준공검사에 통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85에너지소비절약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계획에 따르면 건축연면적 2천㎡(606평) 이상의 수영장, 목욕탕, 숙박시설 등 대형건물을 신축할 때 반드시 폐열회수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시내 모든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4층 이상 격층운행이 의무화된다.

또 연면적 60㎡ 이상의 신축아파트 연립주택엔 가구별로 온도조절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신축건물의 단열시공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 때 단열시공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가로등, 보안등을 새로 설치할 때는 절전등을 반드시 부착 시공토록 했다.

釜山지역 共同주택 建設활기

許可進수 昨年同期보다 倍증가

부산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건설 활동이 작년부터 큰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승인건수는 모두 8건에 1천97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삼익주택의 300세대를 포함하면 모두

9건 1천397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업승인실적은 지난해 3월 말까지의 5건 564세대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시 주택관계자들은 『비교적 공동주택건설활동이 부진한 년초부터 이처럼 활기를 띠는 것으로 미루어 올해의 아파트건설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건설이 이처럼 예년없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지난 2~3년간 크게 침체했던 부동산경기가 올해 들어서 다소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현재 부산에의 사업승인이 난것은 △ 명진개발 40세대(낙민동) △ 부원주택 70세대(온천동) △ 반도주택 260세대(대연동) △ 로얄주택 235세대(연지동) △ 화신주택 195세대(초량동) △ 한신주택 145세대(명륜동) △ 화인주택 70세대(거여동) △ 부광주택 74세대(구포동) 등이며 삼익주택 300세대(대연동)는 심의중이다.

올해 住宅用地 148만평 新規確保

住宅公, 앞으로 住宅型도 多樣化 방침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올해부터 택지를 조기 확보하고 주택형도 다양화해나가기로 했다.

주공에 따르면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기전에 주택용지를 확보함으로써 실수요자에게 안정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점을 착안, 올해에 148만평의 택지를 신규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공은 지난해에 이월된 택지와 신규확보분 등 모두 242만 5천평 가운데 52%인 126만평을 올해에 사용하고 나머지 116만 5천평은 조기 확보해 두기로 했다.

또 주공은 앞으로의 주택단지는 다양한 형의 주택으로 개발키로 하고 △ 9평 12평 15평 안팎의 12층 및 15층형 소형아파트 △ 16~22평의 20층 △ 18~25평 안팎의 25층 아파트를 각각 건설키로 했다.

都市구조 機能別로 多核化

永同등 3개圈 副核都心으로

서울시는 도시기능을 현대화하기 위해 현재 단핵도심으로 돼있는 도시구조를 다핵도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도심구조개편방향에 따르면 올해 도시기능현대화의 기본목표를 △ 도시구조개편에 따른 도심기능의 다핵화 △ 환경정비 촉진으로 인한 도시수준의 향상 △ 기간시설확충으로 도시기능의 원활화등으로 설정하고 현재 4대문안의 단핵으로 돼있는 도시구조를 기능별로 다핵화 해 4대문안 도심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시전역의 고른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심구조개편의 기본골격은 4대문내 현재의 도심을 주핵으로해 도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 여의도 영등포권 △ 잠실권 △ 영등권 등 3개권은 부핵도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3개부핵도심은 △ 여의도, 영등포권이 금융, 상업기능도심으로 잠실권이 체육, 유통기능도심으로 △ 영등권이 업무, 위락기능중심도심으로 발전된다.

또 △ 신촌 △ 청량리 △ 소하리 △ 개봉 △ 천호 등은 구단위 생활권으로 육성, 구내에 상업, 유통, 위락중심의 기능을 갖추도록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도심부적시설을 방면별 시외곽지역으로 대폭이전키로 하고 우선 동마장의 시외버스터미널을 금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망우리지역과 구의지역으로 분리배치하며 용산청과물시장을 강남지역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또 공산품판매상을 업종별 집단이주단지를 만들어 △ 가전제품은 87년 12월까지 용산시장으로 △ 철제상품은 금년 10월까지 구로구시흥동으로 △ 기계공구상은 86년 6월까지 영등포당산동으로 각각 집단이전시킬 계획이다.

내시간 소중하면 남의시간 존중하자.